

총장 직선제의 개선을 제안하며

이 상 신

고려대 서양사학과 교수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총장직선제가 추진된 것은 민주화 열기가 한창이던 '80년 봄의 일이었다. 서울의 몇 개 대학에서 교수들이 한국대학사에서 처음으로 교수 협의회를 발족시켰고, 여기에서 총장직선제도를 마련했다. 교수들이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은 두 가지 경험에서였다. 그 하나는 이미 '60년대부터 군사정권이 비판적인 교수들과 학생운동을 감시, 통제해왔거니와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그 정도가 극심했던 데 대한 경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학재단들의 횡포와 비리에 대한 경험이다. 해방후 설립된 한국 대학들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사학재단들은 총장을 위시하여 중요한 보직교수들을 재단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서 일방적, 단독적으로 임명해왔고 교수채용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불합리

한 인사를 해왔다. 그들은 자체의 불합리한, 부실한 운영에 스스로 불모가 되어 인가권자인 정권의 정치적 간섭에 저항은커녕 오히려 협조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에서 교수들은 유신체제의 몰락에 즈음하여 이제부터는 대학이 더 이상 정권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특히 총장을 직접 선출하고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교권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변화를 위한 교수들의 이러한 노력은 부끄럽게도, 어디까지나 유신체제가 몰락한 후에 비로소 시도된 것이다. 제3공화국의 19년 세월 동안 극소수의 비판적 교수들이 저항적이었다가 탄압을 받았을 뿐, 대부분은 체제에 안주하거나 영합하고 있었다. 그들의 정치의식은 빈약했다.

이러한 점에서 '80년초 대학 변화의 시도에서는 교수들의 정치의식보다는 오히려 사학재단들의 난맥상을 극복하겠다는 의도가, 당시에 정치적으로 제기되었던 대통령직선제처럼 “총장을 직접 선출하고 싶다.”라는 일반심리와 함께 더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내막은 그러했지만 직선제 주장은 당시에 마치 전체 교수들의 민주의식의 표현인 양 명분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늦게나마 체면을 세운 셈이지만, 그것은 당시 상황 덕분이었을 뿐, 그들 스스로의 노력에서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80년 5월 신군부가 집권하자마자 교수협의회들은 발족한 지 1~2개월 만에 해체되어 버렸고, 총장직선제도 파기되었다. 교수들은 그 후 무려 6년여 동안 대학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 총장직선제는 5공 정권이 좌초하기 시작했던 '86년부터 교수협의회들이 재출범하면서 '87년부터 비로소 실현되었다.

총장직선제는 대학 일반에 있어서 본질적, 필수적인 제도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학사회에 유별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폄하되어서도 안 된다. 모든 제도들의 가치는 그 일반성 유무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각 제도는 그 자체의 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떠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어떠한 기대와 의지로써 형성되었으며, 그 후의 전개과정을 볼 때 그것은 얼마나 현실적·비현실적이었던가, 또한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로부터 이탈했는가 등이 고려되면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의 총장직선제는 그 도입시점에서 볼 때 반세기 동안의 사학재단들의 비합리적인 대학운영

과 특히 '60년대 초부터의 4반세기 동안의 군사통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국과 재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편으로서 대학 내외로부터 인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선총장은, 이전의 임명총장들이 방기하고 있었던 학문의, 학습의, 사상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대학은 교권의 확보와 함께 자주적으로 될 수 있고, 대학 본래의 이념에 따르는 발전을 자치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이 모아지고 있었다. 또한 직선제는 당시 통제 받고 있던 우리 사회의 다른 많은 영역들에 각자의 독자성을 세우고 이념과 의사소통의 자유를 확보해 나가는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러나 이상의 긍정적 의미는 직선제의 도입시점까지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 동안의 현실에서 보면, 교수협의회들이 누적된 부정적인 관행들의 폐지, 학사와 인사제도의 개선, 재단 간섭의 극복, 대학본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와 격려 등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인정할 수는 결코 없다. 그들은 미숙했거나 다른 일에 몰두했다. 아마도 '87년부터 정치상황이 개선되어 가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대학 개혁의 의지를 처음부터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여하튼 그들은 별다른 역할도, 성과도 보여 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직선제 운영에 대해서만은 열성적이었고, 이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교수협의회들의 위상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실추되기 시작했다. 즉, 직선제 운영과정에서 보면, 총장 후보 인사들 주위에 이해관계와 친분관계를 근거로 하는 서클들

이 형성되고, 교수협의회의 집행부조차도 특정파를 노골적으로 후원하는 가운데 각 파벌들의 득표작전은 4년 동안 치밀하고 치열하게 전개되며, 막바지에 가서는 여러 호텔에 각 후보의 캠프까지 설치되고 향응이 배풀어진다. 선거를 치른 후에는 당선자를 지지했던 교수들이 거의 모든 보직들을 차지하게 된다. 그들은 여론 수렴과 주도를 위한 능력, 학문적 업적이나 학문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참여실적 정도, 재직기간 등에 관계없이 논공행상격으로 보직에 임명된다. 그리하여 한 대학의 교수사회 내에 심각한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사사건건 소모적인 비판이 행해지며, 대학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은 항상 논란 속으로 빠져든다. 교수협의회가 직선제 운영안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반면에, 이상의 폐해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음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과 신뢰는 실추되어 갔다.

교수들의 책임도 크다. 그들은 개별분야에서는 각각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집단 속에서의 행동에는 무능하다. 본시 그들은 본질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지니고 있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시비를 가리고, 명분과 품위에 맞지 않는 동료들의 행동거지에 대해, 즉 자기 집단에 대해서도 준엄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민주주의 수단인 직선제가 실시된 후로 그들은 주위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데도 침묵해 버리거나 후배교수들의 눈치를 살피며 권위도 팽개친 채 온정주의를 베푸는 무골호인들로 되어 버리는가 하면, 후배교수들도 캠프가 다른 선배들에게는 방자하다. 그들은 후일을 위해 여러 캠프와 연을 맺기도 한다. 직선제가 처음 실시될 때는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중도 등의 경쟁적인 모습이 있긴 했으

나, 그 후로는 곧 지연과 학연이 득표작업에서 중요한 근거로 되었고, 재직시에는 더 많은 수당을, 그리고 퇴직시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보직에 대한 약속도 한 몫을 해왔다. 한국 대학에 기이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보직은 교수들을 학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실제로 보직교수들 중에는 학문을 게을리하는, 아예 학문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교수들이 학문적 이론이나 사회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파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최선의 형식이 민주주의이고, 군중을 수용해야 하는 이 형식은 대중적이어야 하므로 가장 대중적 수단인 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지만, 대중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교수사회가 대중적 수단을 채택하게 되면, 그들도 파당적 집단을 이루고 영락없는 대중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군사통치와 산업화과정에서 그들도 이미 다른 계층처럼 속물화되어 갔거니와, 직선제는 그들의 직업윤리의식마저 더욱더 마비시켜 버렸다.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들은 그 동안 어떠했던가. 그 동안의 면면에서 보면 그들이 모두 다 학문적, 합리적, 개혁적 인물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경우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수가 총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학문을 제쳐놓는 행위다. 학자가 민주주의 원리와 자연권이 봉쇄당할 때 사회생활의 기본권을 위해, 그리고 학문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직선 총장들은 과연 학문을 제쳐놓은 만큼의 대학개혁과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써 사회개혁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던가?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총장이 되었던가? 그들이 대학 밖의 정치행사와 사이버 상류사회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 혹시 비학문적인 명예욕 때문이 아니었던가라는 의심이 든다. 학자는 학문으로써 자신을 내세워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유능하다고 자처했던 한, 대학의 본질과 사회적 위상을, 그리고 한국 대학의 방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있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들은 전인적 교육을 유도하기는커녕 살인적인 경쟁과 사교육비의 낭비를 조장하는 대학의 입시제도에 대한 개혁을 어찌서 정치와 관리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시도하지 못했던가? 어찌서 모든 대학들이 사회적 수요와 학문적 가치에 입각한 전국적인 균형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많은 학과들을 제각기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여 학생들을 증원시키고 사회 각 분야의 사이버 실력자들을 동문으로 흡수하면서 학문을 판매하는 특수대학원을 설치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가?

선비는 결코 자천하는 법이 아니다. 선비로서의 학자는 학문에서 절대적 진리를 항상 회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듯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도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그러하거늘 어떻게 학자가 자신이 보수를, 또는 개혁을 위한 가장 유능한 적임자라고 자처하면서 4년 또는 8년, 더욱이 12년 동안이나 학문을 제쳐놓은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교수들의 파당들이 형성될 수 있는가? 그것은 실로 선비의 금도가 파기되고, 교수사회의 문화가 쇠락해 가는 모습이다. 직선총장들의 대부분은, 해방후 사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몇몇 재단들에 의해 임명되었던 이전의 총장들보다 훨

씬 뒤떨어진다. 특히 인격적인 면에서 그러하다.

총장직선제는 학문과 인격을 겸비한 인사를 선출하는 데 부적당한 제도라는 것이 그동안의 실제 속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직선제는 발전적으로 지양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견해는 단순한 직선제 폐지로 간주되고, 또 '왕정복고'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비판은 직선제 포기가 총장임명권을 다시금 당국과 재단에 반납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왕정복고란 절대군주체제가 '구제도'와 함께 극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금 자의적, 특권적 왕정체제의 회귀가 시도되었던 19세기 초의 서양사의 국면을 지칭하는 역사적 개념이다. 그것은 확실히 반역사적인 모습이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19세기 서양사는 왕정체제를 파기하지 않은 채, 입헌군주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2차세계대전 후에야 비로소 공화체제가 확산되었는가 하면, 강화된 입헌군주체제도 여러 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다. 결국 19세기 이후의 역사는 정치체제에서 대의제도를 강화시켜 나갔던 역사였다. 이것은 19세기와 20세기의 정치 실제에서의 보편성이다.

그렇다면 총장직선제의 지향을 곧바로 '왕정복고'로 비판하는 일은 비약된 논리의 모순이다. 왜냐하면, 우선 총장직선제는 대의제도의 한 방법일 뿐, 그것의 지양이 곧바로 당국과 재단의 일방적인 임명제도로의 회귀는 아니기 때문이다. 직선제 대신에 모든 교수들의 의사가 표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대표들을 통해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간선제를 세운다면, 이것 역시 대의제도의 한 방법이다. 이러한 간선제는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재단의 참여를 배제만 할 것

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되 지난날과 같은恣恣적인 간섭을 제어할 수 있으며, 대중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인한 교수들의 숙물화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간선제는 대의제도를 교수사회에서 더욱 더 효과적으로 품위 있게 실현시켜 보는 시도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직선제의 지양이 '왕정복고'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직선제가 세계 대학들에서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만일 그것이 보편적인 제도이고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기한다면, 왕정복고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보면 간선제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간선제가 오히려 보편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직선제의 지양을 反역사적인 왕정복고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군사정치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하나의 특수한 직선제도를 마치 세계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거나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인 양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특수한 제도를 정작 보편적인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발상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현재의 총장직선제는 신진교수들에게서, 그리고 지방의 거의 모든 사립대학의 교수들에게서 선호되고 있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순수하므로 지성인인 교수들의 선거는 깨끗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또 개혁을 바라는 기대에서, 그리고 후자는 사학재단들의 자의적인 대학운영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선제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신진교수들, 특히 지방대학 교수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의 개혁과 합리화를 별로 가져오

지 못했던 한, 심지어는 5공화국에 호의적, 협력적이었던 인사들도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했던 제도인 한, 우리는 다 함께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바가 있다. 다름 아니라 직선제는 민주적 제도인가 하면, 간선제는 임명식의 어용적 제도라고 보는 양분법적 사고의 지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나 간선제도 역시 대의제도로써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보면 프랑스와,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정치후진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국가최고책임자를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고, 미국도 직선과 간선을 조화시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세계의 대학들에서도 총장 선출은 대부분이 간선제 형식이다. 또한 극복해야 할 바는 직선총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염원이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만 자치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피동적인 사고습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그러한 염원은 마치 계몽군주가 나타남으로써 나라가 개혁된다는 식의 신하적 사고방식과 흡사하다. 자치와 개혁은 간선총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더 바람직한 것은 교수협의회가 감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교수들 스스로가 항상 비판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들도 간선제를 채택하여 과당화를 지양하면서, 교수협의회를 우선 제도적으로 공인 받도록 하고 이를 강화시켜서 대학의 합리화와 개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가 폐해 없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유지될 수도 있겠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직선제, 아니면 간선제로 획일화할 필요

는 없겠다. 중요한 것은 간선제도의 구성과 절차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교수들의 의사표현의 기회와 절차가 마련될 것, 재단과 교우회가 대표를 낼 수 있되, 사회명사들을 포함하여 그 숫자는 결코 교수대표들의 수를 넘지 않는다는 것 등의 기본요건들이 갖추어진다면, 그 외의 여러 가지 구성방법과 절차들이 추가로 활용될 수도 있겠다.

한국 대학사회에서의 이러한 전환은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함께 염려해야 할 바로서 직선제가 그동안 가져온 폐해들이 다름 아니라 대학의, 교수사회의 문화 몰락 현상이기 때문이다. 문화란 넓은 의미에서는 미숙한 또는 성숙한 민족이건, 저급한 또는 고급사회이건 간에 각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들 정신의 집합적, 일반적 표현양식이다. 그러므로 야만적 또는 인간주의적, 조야한 또는 세련된 문화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은 각각의 지역성, 시대성, 역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것들 자체로서 인정될 뿐이지, 모두가 다 용인되고 지향되어야 할 것들은 못 된다. 그런가 하면 문화는 항상 성숙된, 품위 있는 경지로 계발되어야 하고, 이로써 해당민족과 사회를 교양화시킬 수 있고, 여러 영역들과 집단들의 조화뿐만 아니라 물질적 발달과 정신적 발전의 균형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는 그 사회의 창조적인 소수자들에 의해, 즉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법을 지키는 지식인들과 순수예술가들에게서 형성되는 좁은 의미의 문화이다. 그러므

로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모든 사회가 앞으로 더욱 더 접근해 나가야 하는 균형과 절제, 성숙과 세련, 금도와 품위를 선도적으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행동주의, 실용주의가 일방적으로 득세할 때 정신태도의 균형을 세워주는 역할은 그들의 몫이다. 교수사회의 문화는 그러해야 한다. 바로 그 좁은 의미의 문화를 유지하는 일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들이 당대적인 특정한 목표에만 계속 몰두한 채, 대중적인 방법만을 의사표현의 근거로 삼고 있을 때, 그들은 자연히 대중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학문이론적, 사회정치이념적 사고와 판단을 팽개친 채, 또한 자기집단에 대한 반성적 비판에도 무디어진 채 이해관계에 따른 저속한 행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에 교수사회의 문화는 몰락해간다. 한 사회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좁은 의미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문화를 더욱 더 고급화시켜 나가야 할 교수들이 대중적인 수단을 통해 속물화될 때, 그리고 한 사회의 어느 영역에도 성숙된 고급문화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대중문화의 지배 속에 그만큼 늦게 성숙해 나갈 뿐이다. ♣

이상신/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송위원과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 『19세기 독일역사 인식론』, 『서양사학사』, 『역사학개론』 등을 발표하였다.